

‘이태원 국조’ 첫 현장 조사…野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국조 계획서 통과 한 달만…여야,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조문 이태원과출소 방문해 당시 경찰 대응 적절성 질의…유족들 울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 지난 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위가 갖을 울린 지 약 한 달만이었다.

예초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특

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연신 외쳤다. “왜 이제야 왔느냐”는 고함도 들렸다.

분향소 인근에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국정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족들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집회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문을 마친 특위는 참사가 발생한 해민토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다.

우 위원장은 골목길 초입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아프게 유명을 달리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소방관계자의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특위는 곧장 이태원과출소로 자리를 옮겨 참사를 전후

한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잇따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당시 정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만이라도 (골목길) 위아래를 지키며 관리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 통제를 한다고 경찰이 인도로 사람들을 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성실한 특위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11일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사

퇴 의사를 밝혔다가 전날 참사 유가족을 만난 후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특위에) 복귀해 다행”이라며 “여당은 그간의 과오를 깨닫고 (유족에게)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백배 천배 진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여당 위원들이) 사의를 표해 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만큼 (복귀 결정이) 특위를 방해하려는 의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 반드시 규명”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찾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예산안 내일 본회의서 처리” 최후통첩

김진표 의장 “합의 못하면 정부안·수정안 중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나 제시한 합의 시한을 지나서도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를 계속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

다.

그러나 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1%포인트(p) 하향’ 중재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 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재차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19일에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독촉했으나 여야는 시한으로 제시한 날짜가 이를 지난 21일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안 지키면 과태료

이병훈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문화재 조사·발굴·보존의 첫단계다. 현행법은 3만㎡ 이상의 건설 공사 시 시행자에게 공사 시작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지 관할 지자체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조사와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공사 시행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어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 이행의 촉구가외에 문화재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딱히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문화재 보호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입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병훈 의원은 “의무위반시 제재조치가 없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누가 의무를 지키겠는가”라면서 “문화재 발굴에 필수적인 지표조사 의무 이행의 정착을 통해 문화재 유실 방지, 보존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이태원 국조 복귀’ 예산 협상 물꼬 틀까

여야, 원안 vs 중재안 놓고 팽팽…국조 특위 가동, 긍정 기류 기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복귀가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차 회동을 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사흘째 공개 회동 없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전날 오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물밑에서는 접촉을 거듭하고 있으나, 기존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표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 “국민의힘도 더는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 조사에 나서서 등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예산안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여야 모두에서 감지된다.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쳐 특위 복귀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 만큼, 협상 교착 상태

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이다.

민주당도 여당의 국정조사 복귀 결정에 화답, 협상의 여지를 더 열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사행령 예산을 일정 정도 양보하면서 나머지 민생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의 27일과 29일 기 관보고 이전에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 가동이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에 불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증인 채택, 17일밖에 남지 않은 특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는 더 꼬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억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복합블록	▶ 감평가7억7,700억 → 최저가 3억2,300

010-6670-9800

010-2614-9801